

5·18민주묘지, ‘리데파크518’로 조성된다

1,2묘역 유공자 한 곳에 안장
민주화교육 등 관련 시설 설치
문화·휴게·휴양 도시공원 운영

기존 1, 2묘역에 안장돼 있는 유공자를 한 곳에 안장하는 동시에 민주화운동 교육 등 문화복합 공원 시설을 갖추는 게 주 골자다. 4일 5·18 민주묘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민주묘지 발전방안 수립 연구용역’ 최종 결과가 나왔다. 산학협력단은 민주묘지를 추모와 휴양이 동시에 가능한 공원 ‘리데파크 518’로 조성하는 것을 결과에 담았다. 리데파크 518은 먼저 5,000여명에 가까운 5·18 유공자들을 한 곳에 안장될 수 있도록 민주묘지를 재구성한다.

현재 민주묘지에 안장 가능한 생존 유공자 수는 3,800여 명으로 집계됐지만, 민주묘지 내 비어있는 분묘 수는 1,035기(1묘역 4기·2묘역 1031기)에 불과한 상황이다. 또 1묘역과 2묘역이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탓에 유공자들 사이 차별 논란도 빈번했다. 이에 리데파크 518은 두 묘역을 통합, 중앙 참배 광장을 활용하는 방안이 담겼다. 이미 조성돼있는 782기 규모의 1묘역은 그대로 둔 채 1묘역 상단에 계단식 4단 곡장 형태로 추가 묘역을 조성, 이곳에 400여 기를 설치한다. 이후 현재 중앙 참배 광장에 3,400여 기 구

모 묘역을 조성, 1묘역을 포함해 총 4,590기를 설치할 계획이다. 새로 조성되는 묘역은 효율적인 안장 방안과 추모객 친화적인 녹지화 등을 고려해 평장과 같은 자연장 위주로 만들어질 것을 제안했다. 휴양과 추모를 접목한 새로운 시도도 발표됐다. 산학협력단은 민주묘지 남서쪽 입야 4만 1,737㎡(1만2,357평)를 매입해 ‘민주시민교육장’(교육장)을 조성하는 내용도 소개했다. 교육장은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교육 등이 이뤄질 수 있는 문화시설이자 휴게·휴양 시설로 운영된다.

교육장 내 캠핑장을 운영, 관련 교육과 함께 추모객들이 5·18 당시의 공동체 의식을 느낄 수 있게 한다는 복안이다. 추모객뿐만 아니라 유·초·중·고 등 평생 교육의 장으로서도 활용이 가능하다고도 덧붙였다. 산학협력단은 부지 내부를 최대한 활용하는 만큼 큰 예산이 들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이렇게 묘역을 조성했음에도 부지가 모자랄 경우 200여억 원을 들여 주변 임야를 매입하는 방법도 제시했다. 김범태 5·18민주묘지관리소장은 “리데파크 518의 복안이 적용돼 민주묘지가 개편될 경우 일상과 휴양이 복합된 도시공원이 완성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묘지가 추억의 공간을 넘어 생자와 망자가 일상 속에서 즐겁게 어울릴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민찬기 기자



코로나 검사받는 시민 광주·전남지역 코로나 19 확진자수가 4,700명을 넘어선 4일 오후 광주 북구선별진료소에서 한 시민이 코로나 19 검사를 하고 있다. /김태규 기자

‘사단장 이삿짐 동원’ 31사단 부당업무 논란

부서관들 SNS서 갑질 폭로
“개인 아닌 부대물품” 해명

육군 제31보병사단에서 복무 중인 부서관들이 사단장 숙소 정리에 동원되는 등 부당한 업무 지시를 강요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갑질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페이스북 커뮤니티 ‘육군훈련소대신 전 해드립니다’에 따르면 31사단에서 복무 중인 일부 부서관들이 부당한 업무를 지시받았다는 폭로글이 게재됐다. 31사단 직할 대대 복무 중인 간부들이라고 밝힌 작성자 A씨는 “지난해 12월 7일 일과시간 중 입이 무거운 간부들을 중대별로 한두 명씩 선정해 작업을 간다고 전파가 왔고, 대대에 부서관 5명이 선정돼 사단장 공관으로 이동했다”면서 “도착한 공관은 가구, 가전 등이 어지

럽혀져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 통제하지는 소령은 새로 취임하시는 사단장이 오신다고 대대 간부들에게 가구 배치 및 청소는 물론 심지어 냉장고 내부 청소까지 지시했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31사단 관계자는 “제보된 내용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지휘관 관사에서 이전 및 정비한 물품은 지휘관 개인물품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관사 시설 및 비품 관리 관련 규정에 따라 지휘관 관사의 관리 및 정비는 본부대의 임무로 명시돼 있다는 것이다. 31사단 관계자는 “새로 취임하는 지휘관이 개인물품을 갖고 올 예정임에 따라 기존 부대에서 사용되던 부대물품을 다른 장소로 옮길 필요가 발생했다”며 “이에 따라 보관 및 관리 차원에서 부대물품에 대해 이전 및 필요한 정비를 했다”고 설명했다. /최환준 기자

남구, 친일 의혹 ‘일농가옥’ 향토문화재 미지정

광주 남구는 일제강점기 ‘친일 악덕지주’ 의혹이 제기된 사람의 가옥을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4일 남구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친일 시비가 일었던 일농가옥(가칭)에 대해 향토문화유산 미지정 결정을 내렸다. 가옥 소유자와 관련, 친일 논란이 불거지면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문화재 국가등록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문화재적 가치가 있더라도 일제강점기 수탈·친일 논란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어려운 경우 등록을 보류할 수 있다. 앞서 남구 향토문화보존위원회는 사동에 1942년 세워진 지상 2층(연면적 405.23㎡)

일농 가옥에 대한 향토문화유산 지정을 의결했다. 해당 가옥은 1~2층 사이에 방이 위치한 형태로, 목조건물에선 보기 드문 형태며 내부에 1900년대 광주를 알 수 있는 기록·생활 문화유산 자료가 있어 건축·역사적 가치가 높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과거 이 가옥 소유자의 친일 행적 주장이 제기되면서 ‘문화재 지정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민찬기 기자

전남도교육청, 조직개편안 입법 예고

전남도교육청은 전남교육 대전환을 실현하고, 미래교육으로의 도약을 위한 조직개편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안으로 본청 조직은 기존 ‘3국 2관 1단 14과 61팀’에서 ‘3국 2관 1단 15과 64팀’으로 변경된다. 조직개편안은 ‘창의력과 포용력을 갖춘 미래인재 육성’을 위해 미래교육에 적합한 조직체계 구축 및 전남형 교육자치 기반 마련, 그리고 학생 진로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학생 중심의 미래교육을 위해 교육국 미래인

재과를 정책국 미래교육과로 개편하고, 독서인문교육팀을 신설했다. 또 정책국 혁신교육과는 교육자치과로 개편해 민·관·산·학 협력 및 학생인구 정책을 강화하고 지역과 상생하는 전남형 교육자치를 주도하도록 했다. 교육국에는 진로교육과를 신설해 권역별 진로진학상담센터까지 총괄하도록 했다. 도교육청은 이 조직개편안을 오는 18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관련 조례를 전라남도의회에 제출하고,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오는 3월 1일자 시행할 예정이다. /황애란 기자

경매교육 [기초반]
특수반

※ 경매 실전 교육반 (10명)

- 1) 기초반 (기초부터 실전)
- 2) 중급반 (실전부터 ~)
- 3) 특수반 (유치권, 법지, 지분)
- 4) 투자반 (투자가능한분)

▶ 경매 물건 추천 ◀

북구 두암동 (상가주택) ▶ 감정가 3억9천 → 최저가 3억9천
 남구 임암동 (근린상가 2층) ▶ 감정가 5억1,600만 → 최저가 2억8,800만
 서구 매월동 (자동차상가 7층) ▶ 감정가 6억2,600 → 최저가 4억3,800
 광산구 우산동 (근린상가 2층) ▶ 감정가 6억1,700 → 최저가 2억7,600
 광산구 소촌동 (대지 41평) ▶ 감정가 6억5,400 → 최저가 6억5,400
 북구 우산동 (주택) ▶ 감정가 1억4천 → 최저가 8천300만
 서구 화정동 (주택) ▶ 감정가 1억8,500억 → 최저가 1억2,900
 북구 운암동 (아파트) 벽산블루 ▶ 감정가 5억7,700억 → 최저가 3억2,300

010-2614-9801

부동산 사무실 (공동) 쓰실분 상무지구

▶ 상무지구 사무실
▶ 부동산 사무실, 개인사무실
▶ 모든 사무실 가능

(부동산, 경매, 기타정보 공유 가능)
(보 100만, 월 30만) 시비 없음

010-6670-9800